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소상공인 “어찌 살라고” 울상

광주 의무휴업 적용 대상 대형마트 10곳·준대규모 점포 8곳 “경기 침체로 시장 다 죽어가는데...또 타격” 중소기업들 반발

정부가 12년 동안 유지해온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방침을 밝히자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 등 호남권에선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구매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전통시장·소형마트의 존도가 높아 지역 소상공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는 총 10곳과 준대규모점포(SSM)는 8곳이다. 이들 업체는 2012년

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규제에 따라 한달에 2회씩 휴일에 문을 닫았다.

십년동안 지속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의 목소리는 간간히 나왔지만, 논란이 거세자 구체적인 논의는 급기시 됐다. 전국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움직임이 거세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전격 폐지 방침을 밝히는데 이어 의무휴업 제도가 폐지되면 광주 등 호남권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 이 지난해 4월에 내놓은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지역 가구 64.5%는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49.9%)과 전통시장(14.6%)에서 식품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조사에 동네슈퍼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가구는 전국에 걸쳐 41.4%에 그쳤다.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양동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는 유양순(여·59)씨는 “시장에는 아직 덩으로 주는 인심도 있고, 대형마트 보다 유통과정이 비교적 짧게 이뤄져 신선한 재료를 눈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대형마트가 쉬면 재래시장을 한번이라도 나와서 볼텐데 주말 휴무가 평일로 바뀌면 아무래도 소상공인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운암시장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순금(여·63)씨도 “시장 상권이 죽으면서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장사가 안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까지 주말에 문을 연다니 타격이 클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의견 수렴과 그에 따른 권고도 없이 갑자기 폐지를 발표한 것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꼴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승재 광주상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은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온라인 대형커머스 등 ‘유통 공룡들’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들과 상의 한번 없이 유통산업발전법을 변경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언급했다.

일각에선 영세 상인들의 적수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 침투한 식자재 마트와 쿠팡 등 온라인업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구대인시장에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황정량(60)씨는 “코로나 이후 현재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구도보다는 온·오프라인간 대결이 주요 프레임으로 전환됐다”며 “대형마트 의무휴무 규제보다는 지역민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정부 방침을 반기고 있다.

대학생 김지연(여·22·광주여대)씨는 “대형마트에 가면 한 공간에서 여러 물건을 살 수 있고 할인 폭도 커서 시간·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며 “가끔 대형마트 코 앞까지 갔다가 휴무일이라 빈 손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 매주 주말마다 영업하는지 찾아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더니 반갑다”고 말했다.

/김대진 기자 kdi@kwangju.co.kr



새 옷 같은 교복 나눔해요 2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우산동 새마을부녀회 상설교복나눔장에서 부녀회원들이 북구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거한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북구교복나눔장터는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중소 건설사 잇단 회생 신청

도미노 도산 공포 확산

건설경기 침체로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에서 ‘도미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건설업의 비중이 높고 업체간에 서로 엮여 있는 특성 탓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일명 ‘도미노 현상’으로 다른 업체까지 부도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의 A건설사가 지난 17일 법원에 법인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이 회사는 동종업계 순위 100위권 진입을 바라볼 정도의 규모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500위권에 있는 전남의 B건설사도 지난 10일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해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전남의 C건설사도 자금난에 최근 법원에 법인회생신청을 접수했다고 알려졌다.

법정관리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회사의 채권 회수 및 자산 처분 절차가 동결된다.

이후 법원 판단을 거쳐 회생 작업에 들어가거나 파산 수순을 밟는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사업장 한 곳에서만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도 소형 건설업체는 바로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도 밝지 않아 광주·전남 중소형 건설업체의 위기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갔지만, 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나면 바로 부도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기피사유 있는 징계위원 포함된 해고 징계는 무효”

광주지법 해고 무효 승소 판결

징계 대상자가 기피신청을 한 징계위원이 참여해 의결한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A씨가 자신이 일하던 광주의 B신용협동조합(신협)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해고는 무효이며 B신협은 미지급한 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997년에 B신협에 입사해 근무하던 A씨

는 2022년 신협중앙회가 정기 검사결과를 토대로 ‘징계면직’ 해달라고 통보함에 따라 징계면직을 당했다.

A씨의 징계면직은 B신협 이사장, 부이사장과 이사 3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A씨는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C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신협 측은 ‘기피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위원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4명 위원 찬성만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신청 규정도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C위원은 A씨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피해자로서 기피대상자에 해당하고 기피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졌어야 한다”면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이 참여할 경우 분위기를 선도하거나 심의의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외부에서도 징계를 신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사건브로커’에게 돈 받은 현직 치안감 영장 청구

‘사건 브로커’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광주경찰청장을 지낸 A치안감(직위해제)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치안감은 2022년 1월 정기인사에서 사건브로커 성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B경감(당시 경위)을 승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2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가족 욕설한 주취자 뺨 때린 경찰관 선고유예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23일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북부경찰 소속 A경찰관에 대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A경찰관은 지난해 10월 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된 주취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찰관은 주취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심한 욕설을 지속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찰관은 별도 중징계(강등)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족에 대한 심한 욕설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렀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